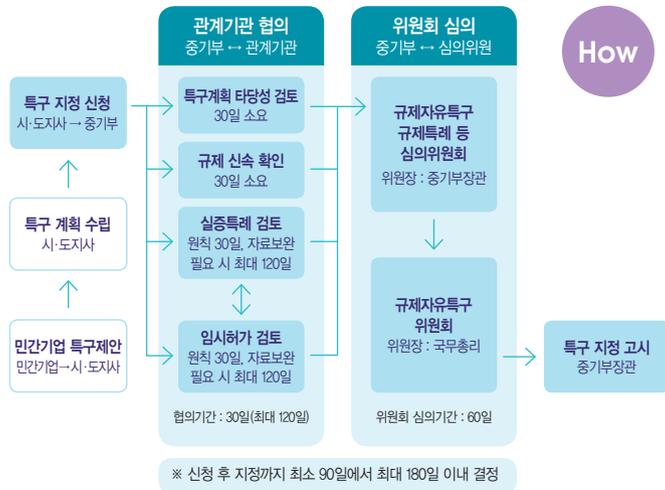


## Q. 규제자유특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 Q.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Safe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피해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별 준비상황은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CONTACT US

지자체	연락처	지방중기청	연락처
부산시	051-888-4772	부산청	051-601-5139
울산시	052-229-6151	울산청	052-210-0020
경상남도	055-211-3182	경남청	055-268-2530
대구시	053-803-3595	대구경북청	053-659-2264
경상북도	054-880-2427	강원청	033-260-1623
강원도	033-249-2287	광주전남청	062-360-9136
광주시	062-613-3823	전북청	063-210-6434
전라남도	061-286-3822	대전충남청	042-865-6132
전라북도	063-280-4237	충북청	043-230-5341
대전시	042-270-3641	서울청	02-2110-6343
충청남도	041-635-3926	경기청	031-301-6955
세종시	044-300-4015	인천청	032-450-1144
충청북도	043-220-3214		
제주도	064-710-4713		

www.ms.go.kr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 규제자유특구

“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혁신적이고 안전한 규제완화가  
시작됩니다!  
”



## Q.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 What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 Q.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혜택 01** | 식당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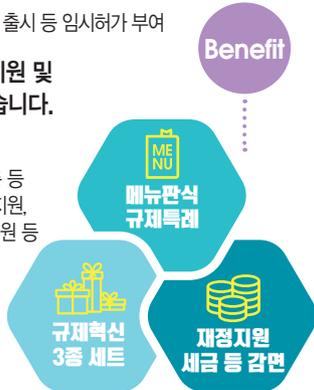
**혜택 02** |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규제 신속 확인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신속 확인
- ② 실증특례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허용
- ③ 임시허가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허가 부여

**혜택 03**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시**
- 재정지원 | 실증센터 또는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지원, 신기술 신사업 관련 R&D 지원, 산학연 협력지원,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 세금 감면 | 법인세, 소득세 등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 Benefit



## Q. 규제샌드박스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규제샌드박스란?

※ 적용 예시

어린아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미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① 규제 신속 확인

#### 사례 01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현황** | 트랙터, 경운기 같은 기존 농업기계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주행 가능, 새로 개발된 자율 주행 스마트 농업기계의 경우 운전자 없이 주행하면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개선** | 특구 내 기업이 시·도지사를 통해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줌



###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사례 02 무인선

**현황** | 현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개선** |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 사례 03 자율주행 버스

**현황** |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개선** | 규제자유특구 내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하여 현 규제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 ③ 임시허가

#### 사례 04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현황** | 새로운 소방용품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어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소방용품은 시장진출에 한계

**개선** |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가능



#### 사례 05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현황** |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개선**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Q.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 지정 신청은 누가할 수 있나요?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14개 비수도권 지역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시, 강원도,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제주도



## Q.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01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시·도에 특구사업 참여자로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수도권 소재기업도 타 시·도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 가능

### 방법 02

신사업, 신기술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안할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해야 합니다.

### How

